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해 농축·재처리 역량 보유해야

글로벌 에세이

최성주

원자력대학원 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㉓ 자체 핵무장이냐 핵잠재력 확보냐

지난 6월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준(準)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한 이후, 라-북 간 군사적 밀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다.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첩보위성 및 핵잠수함 등 고급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핵무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 11월 미국의 대선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핵무장 담론이 더욱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핵(원자력)개발 역사부터 간략히 짚어본다. 그 효시는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홍릉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원전 건설과 함께,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도 비밀리에 추진한다. 이는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결국 좌절된다. 그 대신, 미국은 1978년부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다. 한편, 우리 과학자들은 1970년대 말부터 자체적으로 극소량의 농축과 재처리

를 실험했는데,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파악함에 따라, 정부가 사후 대응하느라 애순 바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게 된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문제가 국내에서 거론된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를 안심시키려 노력하지만,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후 연속적으로 개최된 마-북,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결국 실패한다.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직시하면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미 정상은 작년 4월말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다. 그런데, 올 6월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조약’의 제 4조에 따라, “전쟁 상태에 처하면 자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왕따’로 전락한 푸틴에게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김정은은 ‘은인(恩人)’이다. 반면에,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는 북한은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 지원을 절실히 요망한다. 우리는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두 불량국가 간의 ‘악마적 거래’ 가능성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 국민의 약 70%는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 그런데, 자체 핵무장 옵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는 물론, 원전용 핵연료 확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터이다. 북한과는 정반대로, 1945년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제재에 따른 고통과 불평을 견뎌낼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을 북한과 유사한 ‘문제국가’로 취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추구해온 한국의 가치 우위적 외교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역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 등의 연쇄반응을 초래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핵무기 경쟁은 물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실질적인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책은 한-미 동맹의 내실화다.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고, 미국이 90년대 초에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워싱턴 NATO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에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을 공동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동시에,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재차 개정하여, 우리도 NPT가 인정하는 주권적 권리인 농축 및 재처리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과거 일본이 핵심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꾸준히 설득한 것처럼, 우리도 초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핵잠재력의 확충, 즉 핵자강(自強)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社說

‘시민의 의무’로 각인시켜야 할 기후대응

17일째 폭염...온열질환 잇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진 광주·전남에 온열질환의 심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은 17일째 이어진 폭염특보와 함께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관측됐다. 한낮 체감온도 또한 35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필필 끓는 가마솥더위다. 5일 낮에는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까지 내렸다.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순천에서 발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 지난 3일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인근 밭에서 80대 여성 B씨가 광주첫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광양의 전통시장과 광주 동구에서도 노점상인 80대 여성이 열 실신 증상으로 쓰러지고,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고열 증상과 함께 쓰러졌다. 4일 하루 소방당국에 접수된 온열질환 관련 출동 내역도 전남 8건, 광주 4건으로 잠정 집계됐

다. 뜨거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특히 고령에 야외작업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은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농어촌의 작업 환경은 무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의 관리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올해 온열질환자는 모두 995명으로 65세 이상이 29.5%를 차지했고 작업장(29.3%)과 논밭(18.1%)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계 당국의 한 발 앞선 대책을 촉구한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도 절실하다. 극한폭염과 극한호우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기후대응을 시민의 의무로 각인시켜야 한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의 온도를 겪고 있는 지금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곳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의 경고를 새겨야 할 때다.

잊혀진 영암농민운동 재조명 계기 되길

기념비 건립자금 1억 원 돌파

일제강점기 영암농민항일운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의 항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자금도 모금을 시작하자 3개월 만에 1억 원을 돌파했다. 일제의 불의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모두의 헌신이 만든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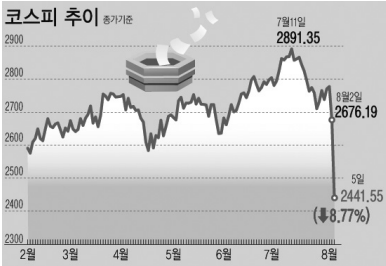
‘영암 영보 형제봉 사건’으로 불리는 영암농민항일운동은 농민과 청년들이 1932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덕진면 영보정에서 항일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더욱 교묘해진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100여 명의 농민과 청년들은 1932년 6월 4일에는 영암 영보리 형제봉에 모여 소작권 이전 반대를 결의하고, 마을에서 항일 만세시위를 벌였다. 국가보훈부도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21년까지 ‘영보 형제봉 사건’에 연루된 40명을 항일운동 독립유공자로 추서했다.

조선 말기부터 식민 통치가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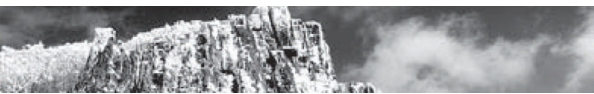
진 일제 강점기까지 영암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활동하던 ‘의향의 고장’이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 유공자로 지정한 인물 가운데 영암과 관련된 인사도 모두 63명에 이른다. 이들은 의병 활동은 물론이고 3·1 운동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일제 강점기 불합리한 소작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주도하고, 사회단체 활동과 애국계몽 운동 등을 통해 국내 항일운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영암의 항일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자양분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영암 항일운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영암군과 전남도부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들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은 기념관이라도 지어 마을의 역사를 오래 기억했으면 한다’는 최윤호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장의 소박한 바람이 들불처럼 번져 그동안 외면받았던 영암농민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다.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판매자(셀러)는 자금난에 빠지고, 소비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이다. 상품권 선 판매와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소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님은 꼴의 사기 형태다. 폰지 사기는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 끼는 식의 ‘돌려막기’ 사기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찰스 폰지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외국에서 사들인 국제우편 쿠폰을 미국내에 유통시키면서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 차익을 얻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였다.

역대 최악의 폰지 사기는 지난 2008년 12월 미국에서 터진 ‘메이도프 사건’이다. 피해 규모 650억달러(약 86조 원), 고객유치금 19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했다. 나스닥 비상임 회장을 3년간 지낸 ‘월가’의 거물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주도했다. 그의 수법은 단순했다. 투자자들에게 경

제가 어려울 때도 1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새로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이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도 폰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백여 가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을 돌려막기한 ‘빌라왕’들은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내부 공모를 통해 집이 필요한 청년 등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런 사기가 발생하는데는 금융·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한국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기의 징후가 있었으나, ‘폭탄’이 터질 때까지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하지 못했다. 더 촘촘한 감시망과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사기의 유형과 수법은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쳐놓은 덫일 수 있다. 언제든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정치가 어지러우니 사기꾼들도 덩달아 판치는 세상이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